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943
----------	------

발의연월일 : 2024. 11. 27.

발 의 자 : 서미화 · 윤건영 · 강준현
권향엽 · 김남근 · 소병훈
박희승 · 전현희 · 백혜련
권칠승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의료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면허를 가진 의료인, 약사 등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운영 할 수 있도록 법률로써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없는 자가 정상적 의료기관이나 약국으로 가장하여 사무장병원 또는 면허대여 약국 등을 운영하면서 부당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고 있음.

아울러, 사무장병원 및 약국을 통한 사기범죄는 해마다 그 수범이 고도화되고 있으며, 재산은닉 또한 지능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24.8월말 현재 이들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무려 3조원에 이르지만 그에 대한 징수율은 7.82%로 저조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불법개설 고액채납자는 채납금액을 자진납부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국외로 밀반출하거나 호화 해외여행을 즐기는 등 불

법적으로 취득한 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지만 이를 제한하는 법률이 없음.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기관 불법개설 및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하여 발생한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출국이 금지된 사람 중 체납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담보물을 제공하는 등의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도록 하여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누수를 방지함과 동시에 공적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3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미화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의2(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출국금지 요청 등) ① 공단은 제 5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7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납입 고지 문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공단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체납자가 체납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부한 경우
2. 제1호의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진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및 그 해

제의 요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83조의2(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출국금지 요청 등) ① 공단은 제5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7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납입 고지 문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u></p> <p><u>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공단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u></p> <p><u>③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u></p> <p><u>1. 체납자가 체납액의 100분의</u></p>

	<p><u>10 이상을 납부한 경우</u></p> <p><u>2. 제1호의 금액에 상당하는 담</u> <u>보의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u> <u>사유가 없어진 경우</u></p> <p><u>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u> <u>는 사유가 있는 경우</u></p> <p><u>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u> <u>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및</u> <u>그 해제의 요청 등의 절차에</u> <u>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u> <u>령으로 정한다.</u></p>
--	---